

내년 지방교부세 총액은 증가하며, 지역별 배분액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 보도내용 >

- 2026.9.8.(화) 서울신문은 「재정분권 역주행...‘꼬리표 붙은 돈’에 밀린 지방교부세 30.5조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정부가 지자체의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용처가 정해진 ‘미래대응기금’으로 돌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”, “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”고 하면서,
 - “‘꼬리표 붙은 돈’인 기금은 지역성장거점과 정주여건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 단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량이 줄어든다. 국가 전략사업에 밀려 지역 현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. 서울·경기와 성남·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직접적인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.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기금이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가용 재원을 더 줄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① 지방교부세 총액은 '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, 내년도 지역별 배분액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- '27년도 지방교부세*는 77.2조원으로 '26년 본예산 대비 +7.8조원 증가(+11.3%)할 전망입니다.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모수가 조정되는 부분인 정률교부세도(보통+특별) 전년 대비 +6.1조원(+9.6%) 증가합니다. 다만, '27년도 지역별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산정 중으로,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* 지방교부세: 정률교부세(보통+특별), 부동산교부세, 소방안전교부세

- 또한, 추세기 산정시 10년 이동평균 개념을 활용하고, '26년과 '27년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'28년 이후부터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증가하여 중기 전망 상 '30년까지 지속 증가*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 지방교부세(조원): ('26년) 69.4 ('27년) 77.2 ('28년) 101.0 ('29년) 117.1 ('30년) 120.7

②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안정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그간 일반회계 중심의 단년도 예산주의 하에서 세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법인세 등 내국세 변동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급등락을 반복해왔습니다. '05년도 이후 교부세가 전년대비 10% 이상 급증*한 사례가 10회, 감소**한 사례가 6회에 달합니다.

* 증액사례: ('21~'22년) +36.8%, ('07~'08년) +23.4%, ('20~'21년) +17.7% 등

** 감액사례: ('22~'23년) △16.7%, ('19~'20년) △12.7%, ('08~'09년) △9.0% 등

- 특히, '23~'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('23년 56.4조원, '24년 30.8조원)이 발생하여 지출 불용, 지방교부세·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. 이러한 세수 결손의 충격은 여유재원이 부족한 재정 취약지역일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.

- 미래대응기금은 이러한 세수 변동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·지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장치로서,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 정부의 재정 안정화에 보다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- 내국세 세입이 추세기*를 상회하는 경우에는, 해당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는 한편,

* 전전년도 내국세 결산액 x (최근 10년 내국세 평균 증가율)²

- 경제상황·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*을 교부세법 개정안에 마련하였습니다.

*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제4조(교부세의 재원) ③ 국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재원 외에 ~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.

③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한편,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도 지원합니다.

-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세대 지원, 국가전략기술 육성, 대규모 지역 산업 인프라 개선 등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적 차원의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
 - 이러한 국가 차원의 보완적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산업·일자리·소득 여건이 개선되고, 신규 세원도 발굴되어 지방정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아울러,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서는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예산 외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 지원금('27안 3.5조원)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지방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, 지방계정 뿐 아니라 청년·성장동력·교육인재 등 미래대응기금 전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, 앞으로 미래대응기금 사업 발굴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입니다.

④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재정 사업에 지방우대원칙을 본격 도입 하였으며, 재정분권 강화 방안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.

- 또한,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지방우대원칙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총 61개 재정사업에 대해 다양한 지방우대기준을 적용*하였습니다.

* 지방우대사업: ('26) 7개 → ('27안) 61개, ('26) 7.7조원 → ('27안)17.3조원

- 수도권과의 거리, 사회·경제적 지표, 인구감소지역 등을 고려하여,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지원을 차등, 지원금 상향, 사업물량 확대, 자부담 인하 등 다양한 우대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, 정부는 ‘범정부 재정분권 TF*’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.

* (단장) 국무조정실장, (위원) 행안부·재경부·교육부·기획처 1급 등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실 지방재정팀	책임자	팀 장	박민정 (044-214-3190)
		담당자	사무관	고병국 (kobk22@korea.kr)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	책임자	과 장	지용구 (044-205-3751)
		담당자	사무관	권순현 (kirin161@korea.kr)

